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7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4. 1. 18. (제 1 차)	

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에 대한  
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※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.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4. 1. 18.

## 1. 의결주문

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'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', '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'이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함)」 제449조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'지배구조법'이라 함)」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3. 주요골자

### 가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60백만원 부과

### 나.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

-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20백만원 부과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### 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### 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2>

### 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(2023.4.6.) 심의필
-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(2023.9.6.) 심의필
- 제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4.1.11.) 심의필

<별지>

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80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

-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-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 제1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및 별표 22, 「지배구조법」 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) 제1항, 제43조(과태료) 제1항 제22호,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별표 2.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-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은 '하이즈 ○○○○○○○○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 제x호'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며 집합투자규약의 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### 나.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

-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
-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은 'xx.xx.x.\*~'xx.x.xx.(118일) 기간 동안 위험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\*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

## 관계 법규

### 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49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### 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

제25조(준법감시인의 임면 등) ③ 금융회사(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)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(의결을 거쳐야 하며,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).

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) ① 금융회사(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)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,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준법감시인”은 “위험관리책임자”로 본다.

제35조(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(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
[별표]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(제34조 및 제35조 관련)

30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

**제43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2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

②~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□ **舊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2021.10.21. 대통령령 제 32091호로 개정되어 2021.10.21.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)**

**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2. ~ 9. <생략>

□ **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

**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집합투자계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2. ~ 9. <생략>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### 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####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##### 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 제1항제22호	5,000

### 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**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### [별표 3] 과태료 부과기준

#### 1. 목 적

이 기준은 「은행법」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## 2. 과태료 산정방식

- 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20>
- 나.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의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0.19>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산정한다. <개정 2017.10.19>
- 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 <개정 2017.10.19>
- 마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12.20>
- 바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 <신설 2013.12.20>

#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(이하 "예정비율"이라 한다)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(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%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 <2020.5.13.>

다.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'중대'로 본다.

#### 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, 나목(5), (6) 및 (9)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25, 2017.10.19>

##### 가. 가중 사유

- (1) 삭 제 <2017.10.19>
- (2)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20, 2017.10.19>

- (3) ~ (4) 삭 제 <2017.10.19>

##### 나. 감경 사유

- (1)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2, 2017.10.19, 2020.5.13.>
- (2)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2, 2017.10.19>
- (3)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19, 2020.5.13.>
- (4)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19, 2020.5.13.>
- (5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(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)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0, 2017.10.19>
- (6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0>
- (7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(법인은 제외한다), 현실적인 부담능력,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0, 2017.10.19>
- (8) 삭 제 <2017.10.19>
- (9)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, 직무정보 이용,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'중대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<신설 2016.7.25>

## 5. 과태료 부과 면제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
- (2)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·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,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<개정 2017.10.19>
- (3)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
- (4) 공무원(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)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,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8조(위법성의 착오)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<신설 2013.12.20, 2017.10.19>
- (5)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,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<신설 2017.10.19>
- (6)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)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<신설 2017.10.19>
- (7)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·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 <신설 2013.12.20, 2017.10.19>
- (8)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6. 기 타

최종 과태료 부과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)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 <개정 2017.10.19>

## 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**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**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17조(과태료의 부과)**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

**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**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(붙임2)

#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4. 1. XX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(50백만원)
임직원	주의적경고 1명, 주의 1명,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통보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하이즈에셋자산운용(주)(이하 ‘하이즈에셋’)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①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(‘19.4.30. 설정)

- 검사대상기간 중 총 59일(‘21.1.30.~3.29.)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\*를 위반(위반비율: 57.9~60.0%)하였음

\* 집합투자규약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: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% 이상이고,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% 이상일 것

②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('21.4.15. 설정)

- 검사대상기간 중 총 143일('22.1.26.~2.21, 3.10.~3.14, 4.15.~6.2, 6.19.~8.3, 8.20.~9.1, 9.18.~9.20.)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\*를 위반(위반비율: 7.7%~54.6%)하였음

\* 집합투자규약 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: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% 이상이고,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% 이상일 것

③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('20.9.22. 설정)

-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('22.1.1.~1.4, 1.21.~3.29.)에 걸쳐 투자대상 자산 취득 한도\*를 위반(위반비율: 31.9%~54.9%)하였음

\* 집합투자규약 제15조의2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: 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의 평균 보유비율이 45% 이상이고,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% 이상일 것

< 관련법규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1호

(2)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

□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,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

- 하이즈에셋은 '18.10.5.~'19.1.30.(118일)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지배구조법」 제28조 제1항

## 나. 주의사항

### (1)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

- 집합투자업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  - '18.11.19. 하이즈에셋은 관계인수인인 AA증권(주)이 동일자에 인수인으로 참여한 ㉠㉠ 전환사채를 「하이즈하이브리드에셋1호」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(매수금액 및 액면금액 10억원)하고
  - '19.5.24. 관계인수인인 BB증권(주), CC증권(주)이 '19.4.30. 인수인으로 참여한 ㉡㉡ 사채(발행시 신용등급 BBB+)를 「하이즈코넥스하이일드 1호」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(매수금액 및 액면금액 19억원)한 사실이 있음

#### < 관련법규 >

##### 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2호

### (2)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

-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  - 하이즈에셋은 '21.11.26. 「하이즈 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6호」가 보유한 6억원(액면가)의 ㉢㉢ 사모사채를 6.01억원에 고유재산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

#### < 관련법규 >

##### 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5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금융투자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673	02-3145-7848